

불법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심사 제멋대로

광주 구청마다 공무원 1명이 전담…객관성 확보 어려워

면제 기준도 제각각…심의위 구성 등 시스템 마련 시급

광주시 일선 자치구의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의견제출) 심사가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마다 교통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1명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 심의 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면제 심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광주시 5개 자치구

에 권고했다.

광주 일선 자치구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 심사를 위한 심의기구가 없어 과태료 면제 심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9만1906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의신청 1만3217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9736건을 면제 처리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100건 중 1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이의신청 10건 중 7건이 면제되고 있는 것이다.

남구는 이 기간 1504건을 심사해 83%에

달하는 1247건을 면제 처리했다. 이어 서구 78%(4859건 중 3767건), 동구 73%(341건 중 249건), 북구 69%(3848건 중 2652건), 광산구 68%(2665건 중 1821건) 순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면제율이 다른 이유는 현재 5개 자치구가 이의 신청 심사를 담당 공무원 1명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1명이 모든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가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고, 자치구마다 구체적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반면 서울 강북구의 경우 공무원 1명과 외부위원 9명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 4년간 의견진술 5373건 중 면제건수는 1827건(면제율 34%)에 그쳤다.

권익위의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구

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동구는 최근 ‘주민 참여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만들어 규칙안 심사를 의뢰해 높은 상황이다. 공무원과 구의원 등 내부인사 4명, 주민 등 외부인사 4~6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와 규칙안을 최종 확정된 뒤 한 달에 2차례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발생하는 회의 수당 등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추위속 구제역 예방 소독작업

광주 북구청 농축산유통팀원들이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망월동의 한 한우사육장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추운 날씨때문에 소들이 내뿜는 콧김이 방역 살포기를 연상시킨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단순 추락사인가...남친이 고의로 밀었나

모텔 추락 20대女 119 이송중
“남친이 떠밀었다” 진술후 숨겨진 급제포된 남친은 범행 부인

‘햇김에 뛰어내린 단순 추락사인가, 남

자친구의 살인 행각인가.’
지난 17일 밤 10시46분께 광주시 소방본부(119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D모텔 705호 투숙객 김모(28)씨. 자신의 여자친구 이모(27)씨가 갑자기 7층 객실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렸다는 내용이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이자 함께

투숙했던 남자친구 김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려워 잠시 숨었겠다’라고 여겼다.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스스로 뛰어내린 ‘단순 추락사’로 결론날 것 같았던 사건은 추락한 이씨가 숨지기 전 밝힌 마지막 진술로 급반전됐다. 이씨가 119구급차에 실려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나를 떠밀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라고 구조대원에게 진술했던 것. 병원 측 관계자도 똑같은 진술을 경찰에 전했다. 이씨는 추락한 지 2시간이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씨 사망 5시간 후인 새벽 5시 30분께 모텔 인근 PC방에 숨어있던 남자

친구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피해자가 했던 마지막 진술로 미뤄 살인 용의자는 남자친구인 이씨로 좁혀지는 듯 했던 사건은 다시 꼬였다. 체포된 이씨가 “놀지만 말고 돈 벌어요라고 구박하기에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창가에서 밀쳐낸 사실은 없다”고 버텼기 때문. 객실 헤어 드라이기가 부서지고 옷가지, 화장품이 마구 잡이로 어지럽혀 있어 둘 사이 큰 다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객실 유리 창틀 사이에선 반항을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남은 흔적(지문)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또 숨진 이씨 체격으로 볼때 선불리 남자친구 김씨를 살인자로 단정짓기 힘들

었다. 가로·세로 50×60cm 크기의 비좁은 유리창 사이로 165cm에 60kg 이상 나가는 여성을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전북지역의 한 고아원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12월 광주로 내려와 모텔에 머물며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여성의 마지막 진술, 검시 과정에서 눈과 목 주변에서 드러난 출혈(목 졸림 과정에서 일어나는 붉은 반점) 등의 이유로 남자친구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살인도, 단순 자살도 결론 내진 힘들지만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인과 용의자 모두 억울함이 없도록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가정폭력 재판 급증

4대악 엄단에...광주가정법원 5년새 5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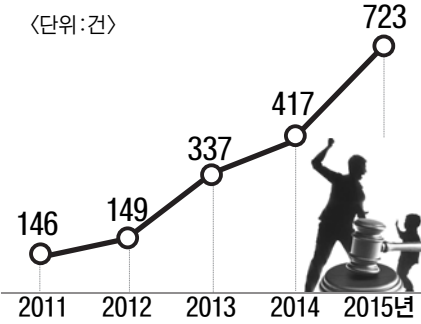
#1. 직장인 A씨는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렸다. 술이 깨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동안은 성실히 지켰고 다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다시 폭행이 이어졌다. 아내 내는 경찰에 신고했다. 겁을 줘 남편의 술버릇을 고치려는 것이었지,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었다.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지만 검찰은 송치했고, 법원은 알코올치료와 상담처분을 내렸다.

#2.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B씨 부부는 생활비와 육아 문제로 자주 다툰다. 서로의 감정을 건드렸고, 남편 B씨는 ‘욕’하며 아내에게 손을 댔다. 법원은 B씨 부부에게 “대화기술이 부족하고, 화 다스리는 방법을 모른다”며 전문가 상담위탁처분을 결정했다.

가정폭력 재판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 가정법원에서만 최근 5년새 5배가량 폭증했다. 18일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지역(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영광·곡성) 가정보호사건은 723건에 달했다. 2014년 417건에 비해 73%(306건)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46건, 2012년 149건, 2013년 337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급증세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가정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을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

■광주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추이



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는 특별법 적용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 가정법원의 분석이다.

예전에는 가정성 개입을 꺼려하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 취하 여부에 따라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4대 악 근절’을 기치로 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적극적 개입’으로 선회,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검찰 송치가 이뤄지고 있다.

황진희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가정폭력으로 송치되면 대부분의 경우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담이나 치료의 강제성 때문인지 재범률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흥기난동 막다 숨진 농협 직원 의사자 신청키로

흥기 난동을 막으려다 숨진 농협 직원에 대해 의사자 인정 신청이 추진된다. <광주일보 18일자 6면 보도>

강진군은 낮으로 포장마차 여주인을 살해하는 등 노점상의 난동을 막으려다 숨진 농협 직원 최모(52)씨에 대해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은 최씨 유족들과 관련 협의를 끝내고 경찰로부터 당시 사건 관련 기록 등이 오는대로 최씨의 공적서와 의사자 인

정 신청서를 작성, 전남도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혜택, 교육비 지원,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혜택이 따른다. 원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최씨는 지난 15일 강진군 마량면 모은행 앞 사거리에서 노점상 김모(52)씨가 포장마차 노점상 B(여·52)씨를 낮을 휘두르는 것을 말리다가 피살됐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l@

교도소 수감 30대, 유치원 절도 드러나 추가 처벌 위기



○...절도 혐의로 광주고도소에 수감 중인 30대 남성이 지난해 자

신이 저지른 또 다른 절도 행각이 들통나 추가 처벌 위기.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모(30)씨는 지난해 9월16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윤모(여·51)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침입, 원장방 서랍 속에 넣어둔 현금 35

만원을 꺼내간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는 것.

○...경찰은 범행 현장과 3k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에서 인상착의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진씨가 유치원·주택 등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전과 12번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접견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절도 혐의로 입건.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층

상가건물매매

- ▶ 1층 (커피숍)
- ▶ 2층~5층 (사우나, 주택)
-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 공실 없음 / 을시설 / 월세 책임보장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1억5천/ 용6억)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주인 직매 010-6670-9800 / 010-7384-7800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보 5,000만 월 500만 ☆ (용1억2천)

매가 6억 8천만

※ 상가겸 원룸건물이므로 장래 갑어치 상승 확실히 있음

010-6834-4800 010-6832-9700